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나55364(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55371(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현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정재훈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6가단342964(본소), 2017가단

31942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9.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9,642,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8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 주장과는 달리 제1심에서도 원고에게 피고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문 제5~6면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목적물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민법 제668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제1심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서 위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피고로부터 도급대금 28,545,000원을 반환받게 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가 제1심이 인정한 4,238,553원을 넘어 61,097,553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존재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¹⁾"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에서도 민법 제668조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수정한다.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분을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피고 주장을 일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위은숙

판사 정승화